

大學 自律化에 관한 總·學長 세미나

趙 昌 鉉

(漢陽大 行政學科)

1. 머리말

근래에 보기 드문 水害로 수많은 이재민들이 잃어 버린 家族과 빼앗긴 財産으로 인해 슬픔과 허탈감에 젖어 있던 8월 20일, 아침부터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학의 總·學長 111명은 6·29 宣言으로 온 나라가 民主化의 열기로 가득찬 가운데 ‘大學의 自律化를 위한 總·學長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 가든호텔에 모였다.

회의는 9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의 리셉션을 끝으로 장장 9시간 이상을 소요하는 백백히 짜여진 일정표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어느 때 같으면 도중 하차(?)하는 총·학장도 더러 있을 법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매우 진지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못 엄숙하기까지 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고 있는 데 필자는 큰 감명(?)을 받았다.

먼저 翰林大 鄭範謨 교수의 기초 연설이 있었고, 곧 이어 그간 각종 大學別로 있었던 會員大學 간담회 결과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서 徐明源 文敎長官 초청의 오찬이 있었는데 徐長官은 이 자리에서 몇 가지의 매우 중대한 政策的 發言을 했다. 첫째로 대학의 自律化 方案을 大學敎育協

議會에서 건의해 주던 거기에 따르겠다는 것이요, 둘째로 앞으로 대학의 일선 總·學長이 모든 대학 행정 문제를 대법하고 개방적이며 유연성 있게 다뤄 달라는 것이요, 셋째로 현재 文敎部는 그 업무의 대쪽 이양을 작업중이며 앞으로 문교부는 국제화·정보화 사회 및 국가 발전에 걸맞는 대학교육의 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점심 시간이 끝난 후 곧 5개 分科 주제 발표 및 토론회가 시작되어 미리 배정된 총·학장은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약 두 시간 동안 각 分科別로 主題發表를 듣고 열린 討議에 참석한 후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에 걸친 토의 결과 발표를 듣고 이어서 곧 종합 토의와 결론에 들어갔다.

2. 基調講演의 요지

먼저 鄭교수는 지난 날의 大學의 非自律化 현상이 “대학들을 窒息狀態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위 빈혈 상태로 몰아갔다”고 비판하면서 行政的 權威主義의 事例를 몇 가지 들고 ‘대학 교수들 로보트화’한 이러한 慣行은 더 이상 열거하기보다는 “이제는 다 지나간 물결에 흘러보내야 할

일들일 것이다"라고 간단히 넘어가면서 本論으로 들어갔다.

그의 論旨는 전환기에 선 한국의 대학교육이 택해야 할 두 가지의 目標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것을 '自律化'와 '秀越化'로 이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自律化'에 있어서는 大學의 脫政治化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날 執權勢力들이 教育界가 '너무나 큰 세력'이기 때문에 教育의 脫政治化를 지키지 못했다고 단정하면서 이 '禁斷'을 지킬 수 있는 '政治人'이 아닌 '政治家'의 출현을 아쉬워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大學의 政治化의 원인이 비단 政治人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大學 社會가 自身들에게 맡겨진 任務를 다 못한, 즉 自律의 실패에도 원인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鄭교수는 自律化의 가장 큰 첫 걸음은 責務性임을 강조했다. 이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바른 선택·결정을 하는 지혜와 고도의 사회적 感受性과 社會의 倫理意識을 수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責務性의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 大學의 教育과 研究의 秀越性 추구, 둘째 대학의 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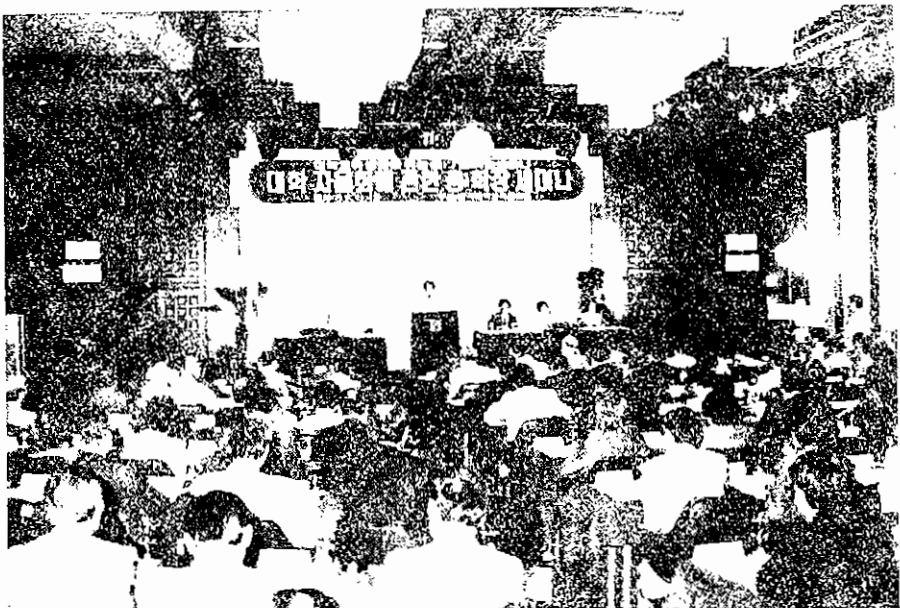
放化, 그리고 세계는 多樣性을 전제로 한 對話, 相互理解·妥協의 습성적 덕목이라고 했다.

이것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첫째는 大學의 教育과 研究의 秀越性 추구에 있어, 大學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自律化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自律化란 自律化 그 자체의 美德도 美德이지만 그것이 大學의 근본 취지인 學問의 傳授와 研究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이란 뜻이다.

둘째는 大學의 自律化는 여러 측면의 開放化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고 鄭교수는 말했다. 開放이 없는 自律化는 자칫 각종 鄉黨化, 朋黨化와 그로 인한 退化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예를 들면 教授採用에 있어서 同門出身, 同鄉出身을 採用하는 大學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하나의 병폐로 지적되고 있음을 그는 상기시키고 있다. 그는 옛날 시카고 대학의 헛친스 總長이 학문적 이론 유파가 다른 교수들을 일부러 採用함으로써 학문적 갈등을 통한 學問의 發達을 꾀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다. 비단 教授採用뿐만 아니라 總·學長의 選任에 있어서도 반드시 자기 學校內에서 선임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또한 閉鎖性의 한 양상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 大學

大學의 自律化는 결국 秀越性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진은 대학 자율화에 관한 총·학장 세미나 광경 ▶



問의 開放이라고 하는 것은 單科大學問의 開放, 學科問의 開放, 教授나 科目의 開放, 教授問의 講義 內容·方法 등에 대한 開放까지도 그는 포함시켰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大學 行政 自體의 開放, 즉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大學의 人事, 財政과 같은 公共事項을 公開할 수 있는 態度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세번째로 鄭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大學의 自律化는 多樣性을 前提로 한 對話·相互理解·妥協의 德目을 갖추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政治·經濟·社會 및 學問研究 등 모든 분야에 걸쳐 民主化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우리의 文化的 취약점이라고 한다.

이러한 自律化와 아울러 鄭교수는 大學의 自律化가 大學 본연의 기능을 위한 前提條件이라고 한다면 大學 본연의 機能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大學의 秀越性 추구라고 얘기하였다. 大學의 秀越性 추구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다루었다.

첫째로 한국의 大學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高級人力, 특히 博士級 人力을 自他가 공인하는 수준으로 自體 養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점이다. 그간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각종 大學院課程에서 수많은 碩·博士가 매년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국내 博士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둘째로 이것과 밀접히 관련된 秀越性의 추구는 우리 學問의 土着化라는 觀點에서 거론될 수 있다고 鄭교수는 얘기한다. 그는 외국에서 생성된 外生的인 概念, 方法, 法則, 理論을 수용하고, 그것을 한국의 토양에서 檢證하고 活用하는 것을 일종의 事大라고 생각하는 옹졸함에 빠지는 것은 안 되는 반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조적으로 韓國의 토양에만 맞는 독특한 理論들을 찾는 것도 우리 大學이 가야 할 한 方向임을 제시했다.

세째로는 秀越性의 추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모든 大學生들을 落伍 없이 다 훌륭하게 教育해낼 수 있는 그러한 강한 教育力의 向上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지적했다. 이제

는 大學이 엘리트만을 교육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그는 경고하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教育理論과 學習理論으로 능히 이러한 과업을 달성해야 하며 또한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네째로는 우리 大學의 秀越性이란 대학간의 隔差를 없애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즉 전국의 모든 大學이 다 秀越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다. 특히 그는 大學問의 심한 차이, 그 중에서도 '地方'大學으로 표현되는 데서 違和感을 조장하는 意識의 差異를 질타하고 있다.

따라서 전환기에 선 한국의 대학들은 기필코 이러한 大學의 地域의 大學問의 隔差를 줄임으로써 地方所在 大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

3. 5개 分科의 主題發表

이번 세미나에서는 5개의 分科別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 먼저 제 1분과에서 주제 발표를 한 金鍾喆교수의 '大學 運營體制의 民主化 및 自律化를 위한 課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大學과 外部 行政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그는 크게 그동안의 大學에 대한 文敎部의 行政的 統制가 지나치게 심화되었다고 강조한 다음 轉換期에 있어서 大學이 나아가야 할 方向은 이러한 政府의 統制方式, 즉 外部 行政의 構造에 있어서 근본적인 變化가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지나치게 中央集權적이었던 文敎部의 大學 政策 및 大學 行政機能을 전면적으로 再檢討하고 再調整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機能의 再調整·再配分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文敎部의 大學教育을 담당하는 部署의 行政 要員들이 전문적 力量과 態度를 갖추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行政 要員의 專門化가 절실히 필요한데 이는 文敎部의 기능이 大學 政策의 開發과 企劃을 위주로 變化될 때 더욱 그러하다고 한다. 세계로 우리나라 大學 發展의 關鍵은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助成 政策을 펴나가야 한다고 얘기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教育 財源의 거의 전부를 學生 負擔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先進

諸國에서와 같은 大學 發展을 구상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네번째로 이미 발족한 大學間 協議機構의 機能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다섯번째는 1987 년도말까지 시한부 기구로서 존속하고 있는 大統領 직속하의 教育改革審議會가 해체된 후에 있어서 大學教育 政策을 위한 정책의 조정, 專門의 助言 및 民主的 參與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大學 政策關聯委員會의 개편·발족이 요청된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大學의 組織 改編에 있어서 金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綜合大學과 單科大學의 區別을 앞으로 계속 존속시킬 만한 이유가 있겠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두번째로는 현재 文敎部에서 하고 있는 集權的이고 劃一的인 行政 統制를 止揚하고 大學의 자치를 명실공히 실천할 수 있도록 國立大學에 있어서도 加칭 理事會 같은 것이 大學別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세번째로는 大學의 機能에 따라서 大學 內部的 行政 組織도 앞으로는 보다 신축성이 있는 體制로 改編되어야 한다고 한다. 네번째는 大學마다 나름대로의 發展 計劃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는 대학 내부에 獨自的인 企劃과 評價의 機能을 수행하기 위한 부서의 설치·운영은 불가피하며 이를 통해 企劃·執行·評價가 循環過程을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다섯번째로는 大學 內部 行政의 운영에 있어서도 각 部署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要員들의 專門的 資質 向上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은 文敎部나 大學間 協力機構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세번째로 大學 內部的 意思決定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金교수는 먼저 大學內의 모든 意思決定機構는 저마다 광범한 參與에 의한 民主的 節次를 밟아서 公정한 決定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둘째로 大學內의 意思決定機構는 각각 그 관할에 따라서 그 책임과 권한이 명료화되어야 하며 상호간에 종적·횡적 連繫 關係가 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세째로 教授들은 學科單位로 또는 單科大學이나 學部 단위로, 그리고 全大學 단위로 각각 그 능력과 적성 및 關心 등에 따라서 大學

의 意思決定過程에 應分의 參與가 보장되어야 하며, 네번째로는 大學內의 意思決定過程이나 그 執行 및 評價의 過程을 포함하는 전체 大學 運營에 있어서 각종 情報의 수집·처리·저장 및 활용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른바 情報管理體制의 활용과 최근 컴퓨터의 活用에 대한 관심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섯번째로 각종 意思決定機構나 그것에 관련된 여러 조직과 기구, 委員會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教授들과 기타 敎職員들은 충분하고 필요한 行·財政的 支援을 받아야겠다는 것이다.

제 2분과 위원회에서 主題發表를 한 서울大의 李敦熙교수는 '總·學長 및 大學 敎職員 任用制度의 改啓를 위한 課題'에서 현행 제도의 問題點을 지적하고 그 改善 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지적한 문제점을 살펴 본다면 總·學長의 任命에 있어서 大學을 學問共同體로 성립시키는 기본적인 人的 組織이며 동시에 교육과 연구의 主體가 되는 教授集團의 意思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行政的으로, 때로는 政治的으로 任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로 현행 教授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人事制度에 있어서 그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이 人事制度에 있어 모든 교수가 大學의 時限附的인 構成員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教授 人事制度를 지배하고 있는 劃一性이 外部的 힘에 의해서 강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任用制度의 改善를 위한 方案으로서 李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것 중 먼저 總·學長의 人事制度 改善案을 보면 國立大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율화를 위해 特殊 法人體로 그 형태를 바꿔야만 組織의 自律性을 制度的으로 부여받을 수 있고, 私立大學의 경우는 學校財團이 우선 그 自律性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的 改編이 先行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 교수회나 혹은 교수들의 대표로 구성된 '教授評議會' 등에서 總·學長을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단지 任用權者의 權限을 제한하고 교수 집단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미에서 總·學長의 후보자를 단수 혹은 복수로 추천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한다.

두번째로 敎授人事制度에 있어서는 먼저任用에 있어서 公開採用制度를 원칙으로 할 것이나 大學의 事務, 學問의 分野, 주어진 條件 등의 다양성에 비추어서 특별 채용 제도도 운영상의 妙를 살린다면 制度的으로 수용될 수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再任用制度에 대해서 그는 이 제도가 大學의 補職制度, 停年制度, 年金制度 등 대학 조직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다른 제도적 조건과 상충되고 있어 改善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면서도 專任講師 이상의 완전 停年制는 자격증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전문직으로서의 임용 이후의 질적 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한 質의 결격기간을 설정한다는 취지에서 助敎授 이하까지는 소정 기간의 契約制度를 적용하되, 副敎授 이상은 停年까지 특별한 실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大學의 '主人意識'을 제도적으로 정착화하기 위한 항구적 신분 보장, 즉 終身制(tenure system)의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제3분과 위원회에서 主題發表를 한 高麗大의 劉仁鍾교수는 '大學 學事運營의 自律化 方向과 그 課題'라는 주제를 논하면서, 먼저 自律화가 안 된 과거를 잠시 회고하고 자율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원인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 이것은 비단 大學과 政府間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大學當局과 敎授, 敎授와 學生 모두가 연관되는 문제라고 제기하고 지금까지 大學敎育에 있어서 政府當局으로부터 많은 規制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規制는 어떤 면에서는 大學人 스스로가 自律的 規制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學事運營의 自律化를 논함에 있어서 前提가 되는 것은 政府와 大學 사이의 相互信賴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능한 한 모든 規制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과 또한 대학 당국과 교수 및 학생 사이에서의 자율화는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교수 및 학생의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민주적 意思疏通의 바탕을 조성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大學 學事行政의 수행이라고 한다.

둘째로 學事運營의 自律化 方向 및 課題에 있어서 6개 항목의 자율화의 방향을 논하고 있는

데 먼저 大學 定員制度의 段階的인 自律化를 주장하였다. 즉 大學 定員制度의 段階를 3단계로 나누어 첫 단계에서는 학과별 정원제를 系列別 또는 大學別 定員制로 전환하여 전공학과의 설·폐와 학과별 인원의 조정을 각 대학에 맡기는 방식으로 자율화하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대학의 정원을 文教部에서 책정하여 주고 단과 대학의 編制나 학과의 설·폐 및 인원 조정을 대학 당국에 맡기는 방식으로 자율화하고 세번째 단계에서는 정원 책정을 대학에 완전히 맡기는 完全自律化 方案을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로 入學 銓衡의 自律化에 있어서는 대학의 入試制度가 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대학의 入學 銓衡의 自律化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 입학 전형의 방향을 구상한다면 고등학교의 內申成績과 입시 전문 기관에서 시행하는 전국적인 시험을 기초 자료로 삼아, 반영의 방법과 비율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다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의 과목 수는 대폭 줄여 나가고 전공 과목의 성적은 志望生의 전공 영역에 따라 그 加重值를 적용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세번째로 卒業定員制의 經過措置의 自律化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서 大學 卒業定員制의 폐지에 따라서 생기는 경과 조치를 대학에 일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네번째로 敎育課程 編成·運營의 自律化에 있어서는 정부의 규제와 대학간에 있어서의 자율화뿐만 아니라 대학내의 민주화 및 자율화의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섯번째로 劃一的인 學科別 敎授 定員 基準의 폐지에 있어서는 대학에서의 교수 채용은 어디까지나 敎育課程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수 정원의 기준 책정은 학과별로 되어 있어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한다. 끝으로 學位 登錄制의 폐지에 있어서 학위수여권은 대학이 가지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대학이 이를 잃게 되면 大學의 存在 意味마저 상실되는 셈이므로 학위 수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당연히 대학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한다.

다음으로 제 4분과 위원회에서 東國大의 裴鍾根교수는 '大學 財政運營의 效率化와 自律性'이라는 제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재정 운영의 취약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그는 1984년도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 投入되고 있는 經常財政 規模가 1조 3천 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것이 학생당 公教育費에 있어서 1984년에는 1,056弗이었고, 教授當 學生數는 38명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財政 運營의 문제점으로 그는 8가지 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財政 運營에 있어서 主體性이 약하다는 것, 둘째로 財政 運營에 있어서 目標 妥當性의 기초가 약하다는 것, 세번째 문제점으로는 目標 管理性을 들고 있다. 네 번째의 문제로 大學 財源의 自助的·多元的 增殖을 억제하고 있는 문제를 들고, 다섯째의 문제는 大學 財政의 劃一的·指示的 運營의 문제로서 國·私立大學의 豫算이 文教部에서 작성한 豫算指針에 따라 編成되고 이것이 文教部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집행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다. 여섯번째로는 教育活動의 經濟的 價値 評價의 基本單位라 할 수 있는 教育原價가 없다는 것이다. 일곱째 문제가 되는 것은 大學 財政 運營이 會計中心主義로 運營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감사를 의식한 會計的 合法性 여부가 대학 재정 운용의 핵심적 관심 사항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덟번째 문제는 大學 財政 運營에 있어서 財政의 適正 規模에 대한 認識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덟 가지의 현 大學 財政 運營의 취약점을 지적한 裴교수는 그 해결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大學 財政 運營에 있어서 主體性의 강화를 위해서는 總·學長이 大學 總豫算의 編成權을 가져야 하며 教授는 豫算 編成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두번째로는 財政 運營의 信賴를 높이기 위하여 總·學長은 매년 教育財政 運營計劃을 발표하는 것을 制度化하고 公開化를

促進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세번째로 目標 管理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總·學長은 大學의 營造物 管理者가 아닌 최고 책임자로서의 位置를 확보하여 제도적으로 기획실, 대학교육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內部 統制機能의 강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네번째로 大學 財源의 自助的·多元的 增殖을 위하여 국고의 증액, 기부금의 유치, 후원 단체의 확대, 私學의 경우는 각종 稅金의 減免, 公債의 發行, 私學 育成財團과 私學開發公社의 설치, 理事會의 生産的 開放, 財政 處分에 대한 文教部의 승인 제도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번째로 文教部의 豫算 編成 指針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으로 그 성격을 전환하고 豫算 編成, 公納金 策定, 獎學金, 實驗實習費의 결정은 大學이 자율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섯번째로 教育費原價制度를 導入하여 學科別, 系列別, 差等公納金制의 실시와 實驗實習費 會計를 신설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일곱번째로는 현행 會計中心的 財政 運營을 지양하여 大學 財政會計法의 制定, 會計 監査를 종합 경영 평가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項目 豫算制度에서 包括豫算制度로 전환하는 방안의 모색과 아울러 教育 事業의 長期投資體制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大學 財政의 適正 規模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分析을 위한 常設機構의 설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제 5분과 위원회에서는 延世大의 崔正燕교수가 '學生 自治活動의 方向과 學生 代表의 大學 運營 參與'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오늘날 우리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學生 自治活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5가지로 지적한 다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학생 자치 활동 機構의 構成 문제에 있어서, 종래의 5원칙을 문제 삼지 말고, 학생 전체가 정당한 民主 節次에 의해서 참여하는 代表機構이면 학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두번째로 여기 수반되는 문제로서 活動費의 징수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회비의 책정, 징수 방법 등은 모두 학생들이 自治的으로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므로 학교는 예를 들어 등록금 징수 때 동시 징수를 요청해 오면 학생처장이 그 액수, 예산 등의 조정과 지도를 하고 會費 징수에 협력을 해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번째로 모든 학생들의 축복 속에서 統攝된 학생자치 기구가 탄생하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공식 기구가 發足되면 여기 대항하여 별도의 기구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학교는 뚜렷한 原則과 公正하고 一貫性 있는 태도와 의연한 지도 역량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한다. 네번째로 學生 代表의 大學 運營 參與 문제에 있어서는 외국의 예와 소속 대학의 경우를 들어서 학교내에 있는 복지위원회나 식당관리위원회, 학생회관 운영위원회 등과 같은 특정한 위원회에 학생 대표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意見을 開陳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이 大學의 主人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大學은 국가와 민족의 것이지 설립자의 것도, 총장이나 대학 교수의 것도, 더더욱 학생의 것만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오컨대 學生 自治活動의 방향은 무리한 간섭이 없이 自治 能力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적이고, 學生 代表의 學事運營 參與 問題는 학생 복지에 관계되는 분야에서 허용하는 정도로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4. 綜合討議

5개 分科委員會 會議에 이어 열린 綜合討議에서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그동안 논의되었던 의견들을 토대로 보다 具體的이고 合理的인 自律化 方案에 관한 전국 대학 총·학장들의 토론과 의견 종합이 있었는데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미나 종합 토의의 결과는 大學 自律化의 기본 前提와 討議 結果 綜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大學 自律化의 기본 전제를 보면, 첫째로 大學의 自律化는 대학교육의 本質과 秀越

性을 추구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로 劃一的인 自律化는 지양하고 개별 대학의 開放性和 多樣性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自律化의 추진을 위해서는 資務性이 수반됨을 깊이 인식하여야 하고, 셋째로 大學의 自律化는 시행착오의 배제를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우선적 과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討議 結果의 綜合 內容을 보면, 먼저 總·學長의 選任 節次에 있어서는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국·공립은 정부가, 사립은 理事會가 선임하도록 하며 현행 사립대 총·학장의 任命 承認制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두번째로 理事會 運營에 있어서는 국·공립대도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 私立大의 이사회는 教授 代表의 參與 등을 포함하여 보다 開放的으로 改編·運營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세번째로 教授協議會의 構成·運營 問題에 있어서는 전체 교수가 참여하는 교수협의회나 교수평의회는 바람직하나 平教授만의 協議會 構成은 있을 수 없으며, 교수협의회의 구성·성격·역할은 신중히 연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네번째로 教授 人事制度에 대해서는 우선 교수로서의 能力과 資質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採用 節次를 確立하여야 하며, 교수의 身分 保障을 위해서는 교수·부교수급은 終身制(tenure system)를 도입·적용하고, 조교수 이하는 계약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대학의 실정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하며, 大學內 單科大學 學長의 선임에 있어서도 교수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섯번째로 學生의 大學 運營 參與 및 自治機構의 構成 問題에 있어서는 학생 대표가 大學의 基本的인 운영을 위한 會議 등에 참여하는 것은 교권상 배제되어야 하나 학생복지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도서관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학생 自治機構는 任意的인 것이 바람직하나 당분간은 教授의 指導 아래 지도·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었다.

여섯번째로 學事 運營에 있어서는 入試制度, 敎育課程 運營, 學點 配定, 卒業 認定 등은 각 대학의 自律에 일임하되, 특히 入試 問題는 각 대학이 희망하는 범위 내에서 政府나 大學間 協議體 등이 공동 출제·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하며, 大學 定員의 自律化 問題는 계열별 또는 대학별 정원제——전체 정원은 문교부가 책정하고, 세부 운영은 대학에 일임——그리고 대학에 완전히 일임하는 3단계로 추진하도록 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학생 수가 적은 小規模 大學과 地方 分校의 경우에는 적정 정원 규모를 연구하여 増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 학사 경고 제도는 유지하되 학위등록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學生의 大學間 편·입학 및 大學內 전과는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일곱번째로 大學의 財政 運營에 대해서는 私學 財政에 대한 政府 支援의 擴充과 豫·決算의 정부 보고 및 承認의 철폐와 아울러 각 대학의 실정에 따른 公納金 策定의 自律化, 학생 장학금 지급 의무 기준의 폐지 및 학교 형편에 따른 自律의 人員과 支給 方案의 결정, 나아가 대학의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기부금의 손비 처리 한도액 상향 조정 등에 의견이 모아졌다.

여덟번째로 大學間 差等 問題에 있어서는 종합대와 단과대의 불합리한 差等이나 제도적 區別의 철폐와 아울러 교육대학 기성회비의 상향 조정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아홉번째로 除籍生 復校 問題는 개별 대학의 제적생 복교심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대체적인 의견 수렴이 있었다.

끝으로 기타 문제로서 大學 施設 基準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교육대학 학생들의 추수교육을 위한 大學院 교육 기회의 擴充 그리고 大學間 協議體인 大學敎育協議會의 機能 強化를 통한 대학간 협의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5. 맺는 말

위에서 살펴 본 대로 비록 짧은 9~10 시간의 세미나이기는 했지만 오늘 우리나라 大學이 直面하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總·學長들이 討議하는 것을 보고 몇 가지 느낀 점을 여기에 적음으로써 結論에 대신하려고 한다.

먼저 이번 세미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흔히 많은 政策을 다루는 세미나가 그렇게 되듯 극히 피상적인 문제에만 연연한 듯한 인상을 떨쳐 버릴 수 없게 하였다. 물론 당장 가을 학기의 시작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처지에 과거를 깊이 있게 省察하고 긴 앞 날을 전망하는 여유를 갖기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님에 틀림없으나, 특히 이번 세미나의 主題가 主題인 만큼 좀더 根源의인 문제의 核心에 대한 反省과 회고가 있었음직도 한데 거의 한결같이 大學의 自律化가 없었던 것이 모두 他律的 外部 要因에만 원인이 있는 것처럼 매도(?)한 듯한 인상을 준 것은 필자를 크게 실망시킨 일이었다.

물론 學生들의 活動이 政治化(?)된 데 대한 大學 外部 勢力의 規制가 他律化 要因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反面에 大學의 財政·學事 運營 등에 있어서 國·私立을 막론하고 우리 大學들이 責任 있고 權威 있는 自律의 意慾과 能力을 가졌었는지 한번쯤 모두 反省했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앞으로 民主化가 되고 大學에 대한 外部 勢力의 干涉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 大學이 과연 成熟한 責任 있는 自律化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大學人의 姿勢에 대한 깊고 철저한 自己檢問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두번째로 느낀 것은 이번 세미나가 마치 政策 決定過程에 되도록이면 自己集團의 利益을 더 많이 反映시키려는 會議과 같았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총·학장 회의라고 해도 그 중에는 國立大와 私立大, 綜合大와 單科大, 一般大와 敎育大, 正規大와 非正規大 등 大學間의 規模, 機能, 目的, 設立 主體 등 많은 差異가 있기 마련이다.

이것들은 敎育의 民主化가 가져온 필연적 多樣性 내지는 多元性으로 이해되고, 그들 각자가 大學敎育에 공헌하는 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大學은 똑같은 機能과 目的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때가 적지 않은데 이번 大學 自律化를 위한 세미나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이 서로 다른 機能과 目的을 갖는 大學이 同一하게 취급되기를 원하는 듯한, 自己利益(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그렇지도 못한데)을 代辦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준 것은 다소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 예를 들면 單科大學과 綜合大學의 區分을 철폐하라는 등의 要求는 民主化로 가는 大學의 自律化와 직접적인 관계가 별로 많지 않은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大學이 自律化되던 자연스럽게 大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어떻게 하면 大學이 自律化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文敎部를 상대로 차제에 그간 不滿이 있었던 모든 政策을 일일이 성토폰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세번째로 이번 總·學長 세미나에서는 우리 한국 大學生들의 달라진 모습과 역할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짙었다. 소수를 제외한 大學 總·學長들은 아직도 우리 大學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우리 大學生들의 思想, 行態, 役割에 대한 實證的 認識이 不足한 채 옛날 방식대로 이들을 管理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해서 안타까웠다. 필자는 결코 현재 우리 大學生의 思想, 行態, 役割이 다 옳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인상이 아닌 實證的 認識이 적어도 앞으로 우리나라 大學을 이끌어 갈 總·學

長에게는 前提되어야 하겠다는 안타까움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總·學長 세미나에서 느낀 것은 大學의 自律化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보인 總·學長들의 관심은 安定이란 이름 아래서의 自救的 努力이 大學의 原來 目的인 秀越性의 추구보다 더 중대한 의제로 둔갑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인상이었다.

왜냐하면 基調講演에서 強調한 바와 같이 大學의 自律化란 결국 秀越性이란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한 方便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무엇보다 秀越性의 追求를 위한 진지하고 뼈와 살을 깎는 듯한 學問的 反省과 깨달음이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기실 大學 總·學長을 어떻게 뽑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大學의 課題中에서는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다. 그것은 時代的·地域的으로 살펴 보면, 그 어떤 方法이 꼭 옳다는 結論이 나올 수 없는 문제이다. 다만 그 나라의 歷史, 文化, 傳統과 現實의 問題意識 속에서 짜내야 할 한 方便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大學의 秀越性을 최대한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냐에 있다. 따라서 대학의 수월성 추구에 대한 장애적 要因이 무엇이었는데에 대한 솔직하고 용기 있는 分析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러한 努力이야말로 바야흐로 民主化를 맞는 大學의 總·學長들이 앞장 서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大學의 自律化를 위한 總·學長 세미나에 참석하여 느꼈던 소감 몇 가지를 적어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과 9~10시간에 그친 극히 제한된 접촉에 근거한 몹시 피상적인 인상이기 때문에 그 중 많은 부분은 잘못된 인상, 오해, 누락 등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여기에 고백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